

편견과 차별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에이즈환자도 장애인에 포함시켜야

에이즈만큼이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한 질병은 없다.

2002~2003년 세계에이즈 캠페인이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일 만큼 세계적인 문제이다.

과연 에이즈에 썩어져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어떻게 벗길 수 있을까?



이예숙
수원 팔달구보건소
예방의약담당

현재까지 에이즈는 치유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에이즈 감염인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 및 공포와 주위의 냉대와 편견으로 인하여 많은 심적 고통과 압박을 겪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소외, 고립되어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다. 삶에 대한 비관으로 인해 자포자기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편견, 부정적인 시선들이 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가족이면서도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밖으로 내몰아 갈 곳이 없어 방황하게 했고, 병원에서는 다른 환자와 똑같이 대해주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그들은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까 늘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포기하며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한편으로는 질병(AIDS)과 싸워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높은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하소연 할 곳조차 찾지 못하여 더욱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

감염경로가 어쨌든 인권은 보장돼야

이제 우리도 에이즈에 대한 이런 그릇된 선입견을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생명이 고귀한 것이라면 어떤 종류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그 생명의 존엄성과 인격은 보호받아 마땅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라도 설혹 그것이 동성애나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염인의 인권만큼은 끝까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계몽과 예방, 홍보·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겠다.

HIV 감염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신분노출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들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에이즈에 대해서 많은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왜곡되고 과장된 부정확한 사회의 인식과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감염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도 미래의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고 재취업 등의 사회적응에 한계를 절감하여 스스로 고립되거나 격리된 채 현실을 비관하면서 폐쇄된 생활을 하기 쉽다.



에이즈환자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에이즈환자도 넓은 의미의 장애인이고, 사회적 약자이고 이들 또한 사회복지의 대상인 것이다.

국가차원의 통합진료서비스를 통해서 질병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최저 생계를 유지하며

기본적인 권리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보다는 극단적 생각(자살충동, 우울증, 대인공포증 등)에 빠져들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인식의 변화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에이즈환자, 경제적 지원 절실

HIV감염인들은 에이즈환자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사회활동에 거의 지장을 받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주거, 교육, 고용 및 치료, 성생활, 복지후생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어떤 감염인들은 결혼할 권리마저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감염 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자녀교육의 문제 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 장치와 경제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겠다.

이제는 점차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에이즈환자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에이즈환자도 넓은 의미의 장애인이고, 사회적 약자이고 이들 또한

사회복지의 대상인 것이다.

국가차원의 통합진료서비스를 통해서 질병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최저 생계를 유지하며 기본적인 권리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우리 사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포용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에이즈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환경조성이 미흡한 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너무 많이 이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겠으며 지난 대선기간 중 후보들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피력했다. 팔로만이 아니라 소외된 이가 없는 사회,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바이다.